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7월 11일 화요일 (음 윤5월 18일) 제184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시, 부영주택 일방적 임대료 인상 횡포 대응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필요성 제기”

김승수 시장, 공정위 방문 직권조사 요청서 제출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횡포에 대응하고 나선 전주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주택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부영 등 일부 건설업체들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아파트 임대료와 분양전환 보증금이 합당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허가부영 임대아파트 입주인 대표 등은 10일 세종 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부영주택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청은 시가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향시킨 5%로 인상한 (부영)주택을 고발하고, 정치권에 임대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대료 상향선을 연 2.5% 이내(2년에 5%)의 적정수준 인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 인고를 지자체가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한데 이은 후속조치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구)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임차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년 임대료 상향선인 5% 인상을 적용하며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영주택은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계약기 한을 넘기면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허가부영 임대아파트 입주인 대표 등은 10일 세종 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부영주택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연체료 12% 부담’하는 조항을 들어 압박하며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허가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도 지난달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4호에 의거해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임대료를 상향선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이들은 또, 지난 4일에는 전북소비자 정보센터를 방문해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의 분쟁에 대한 상담과 피해내용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

행 사후 3개월 이내 신고에서 1개월 전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한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는 것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하기 전 해당 지자체와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무시하고 매년 최대치인 5%씩 인상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전주시는 11일 남원시와 김제시, 강릉시, 여주시, 목포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과 시·군 연대회의를 개최하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날 연대회의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 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승수 시장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더 이상 인상된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눈물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의 구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임대료 인상 상향선을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향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대는 지난 7일 오후 대학 진수당 바오로홀에서 2017학년도 하계 및 2학기 오프캠퍼스 발대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전북대, 하계·2학기 오프캠퍼스 출범 미국·영국 등 15개국 48개 대학서 학습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학생들에게 외국어뿐 아니라 그 나라와 지역의 문화까지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프캠퍼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해외 대학에 파견한다.

전북대는 지난 7일 오후 진수당 바오로홀에서 2017학년도 하계 및 2학기 오프캠퍼스 발대식을 갖고 출발을 알렸다.

이번에 해외 대학에 파견되는 학생은 모두 325명으로, 미국 UC 리버사이드대학교와 블룸필드대학, 영국 예지힐대학교·세필드대학교, 캐나다 브록대학, 호주 스윈번공과대학교, 필리핀 산호세대학교,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교 등 15개국 48개 대학에서 공부한다.

이들은 최대 1년까지 해외 대학에서 머물며 현장형 어학수업과 기초 전공수업 등을 듣고 학점도 인정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지 가정에서의 홈스테이와 봉사활동, 인턴십, 문화체험, 현지 기업체 탐방 등의 기회도 가질 예정이어서 해당 국가나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프캠퍼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졸업까지 최소 한 학기 이상 다른 나라나 특정 지역에서 생활하게 하며 현지 언어뿐 아니라 문화까지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북대 모험생 양성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정해은 기자

도내에서도 국민의당 ‘당원 탈당’ 현실화

제보 조작으로 국민의당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우려했던 전북지역에서도 ‘당원 탈당’이 현실화되고 있다.

10일 뉴인인 국민의당 중앙당 정책위 부위원장 겸 전북도당 부위원장 등은 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저와 뜻을 같이하는 김제지구당 당 부 당직자 및 당원들은 오늘 당을 탈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제보 조작사건과 관련해 당 지도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동안 강조해왔던 새정치라는 핵심가치는 고사하고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겉으로는 도덕정치, 새정치를 내세우면서 중앙당 당직자 및 지방 각 지구당에서 행해지고 있는 패거리 구배정치는 한마디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당 사태를 보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위해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민 앞에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들의 탈당을 시작으로 전북지역에서 이른바 ‘탈당 러시’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성추행감사, 학생입장에서

5면 - 대시질환 치료제 개발 나선다

6면 - 최저가낙찰제 제도입 강력반발

16면 - 민선6기 3주년 장수군정 결산

제10대 전라북도의회 개원 3주년

오래 도정만 바라볼머 뒤돌아보다